

## ●일일스터디\_표준안

이름 / 언론사 / 작성날짜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단독]전국서 투표용지 4726장 모자랐다…100장 넘게 부족한 17곳 모두 서울	정치	
2	대기업 성과급에…상위 10% 월소득 1500만원 첫 돌파	경제	
3	신석기 고래사냥 흔적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문화	

### (1)기사/뉴스요약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선거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총 4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인데, 전부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한 67개 투표소의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 당초 배정한 투표용지 수와 추가 배부한 투표용지 수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50곳은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고, 17곳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물량을 배부한 곳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다. 본투표일 1836명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당초 이곳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불과했다. 436장이 부족했다는 것. 이날 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23.75%)은 당초 배부된 투표용지가 아니라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뜻이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 성북구 장위1동 6투표소에서 277장이 각각 부족했다.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특히 혼란이 컸던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도 179장이 모자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이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선관위는 투표 당일 각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은 본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물량을 배정하고, 반대의 경우는 높은 본투표율을 예상해 비교적 많은 물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1.01%로 전국 평균(23.5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투표 참여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본투표 대상자(4074명)의 절반 수준(51.55%)인 2100장에 불과했다. 부족 매수가 가장 많았던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 역시 본투표 대상자는 2612명이었지만, 당초 배정된 투표용지는 53.60%인 1400장뿐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닌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며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기사/뉴스요약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500만 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2년 연속 감소하고 중산층도 제자리걸음을 해 양극화가 심해졌다.

8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53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 상위 10% 가구 소득이 월 15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 소득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1분위 가계소득(73만7000원)은 1년 전보다 0.9% 줄면서 2024년 1분기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5분위 평균 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20.9배로 전년(19.9배)보다 확대됐다. 배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 지표가 나빠졌다는 뜻인데, 2023년 1분기(21.4배) 이후 3년 만에 다시 20배를 넘어섰다

중산층은 정체를 겪고 있다. 소득 6분위(0.9%)와 5분위(1.5%), 4분위(1.6%)의 소득 증기율은 모두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밑돌았다.

서지현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더 높았다"며 "1분기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이 대기업 위주로 지급된 점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할 경우 소득 양극화가 심화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과로 한국 경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업종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소득과 자산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의 과실이 보다 폭넓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3)기사/뉴스요약

선사시대 한반도의 고래잡이 역사를 품은 작살촉이 국가민속문화유산이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신석기시대 문화유산인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예고된 대상에는 2010년 발굴조사에서 고래 꼬리뼈에 박힌 채로 발견된 작살촉과 어깨뼈에 박혀 있던 작살촉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기원전 4000~3000년경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작살촉은 사냥감의 뼈에 박힌 상태로 발굴된 희귀한 사례로 꼽힌다. 유산청은 "신석기시대 한반도인의 생활문화와 생업기술, 도구 제작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며 "고래잡이 과정 등이 새겨진 울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와도 관련 깊다"고 설명했다.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은 예고 기간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뒤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된다.